

#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북핵협상 대응 논의”

워싱턴서 양자·3자회담  
“대화 모멘텀 살릴 방안 얘기”  
“3국 대북조율 중요성 확인”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사흘만인 8일(현지시간)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미 워싱턴DC에서 만나 향후 대응 방향 및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간 3자 회의는 물론 한미, 한일 협의 등 연쇄 양자 협의도 진행됐다.

미 국무부는 “3국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미 실무협상 등 최근 북한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 및 다카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및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미일·한미일 간 이뤄진 협의를 확인하면서 “완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동했다. 왼쪽부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카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연합뉴스

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한미·미일, 그리고 한미일 3국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쇄 회의는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스톡홀름 협상에 대한 내용 공유 및 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양자·3자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는 데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면서 한미공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공조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간, 미일 간 동맹 및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스톡홀름 노딜’로 인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한번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북대응을 위한 삼각 공조를 재확인한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미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간 지속적 대북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국 간 대북 공조 전선에는 여파를 미치지 않는 안 된다는 미국 측 의지를 반영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미국 측은 그동안 한일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양국에 주문하면서 양국 간 갈등으로 인해 한미일 간 대북 공조에 균열이 초래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 본부장은 이날 다카자키 국장과의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이 본부장이 미국에서 한일 협의를 별도로 한 건 드문 일로, 한일 간 갈등 국면에서도 양국 북핵수석대표가 대북 대응을 놓고 긴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본부장은 또 데이비드 스티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도 면담하고 북핵·북한 문제 및 양국 간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그동안 한일 북핵수석대표의 회동을 비롯, 보도자료 배포시 주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써왔으나 이날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다. /연합뉴스

## J&J 10조원 징벌적 배상 판결

“유방 유발 위험 고지 안 해”  
美배심원단 “20대에 지급해야”

미국 배심원단이 남성들에게 여성형 유방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에 거액의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민사법원 배심원단은 니콜라스 머레이(26)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에 80억 달러(약 10조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머레이는 미성년 시절인 2003년에 이 회사의 정신질환 치료제 ‘리스페달’

을 복용하기 시작한 뒤 유방 이상 비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그의 변호인은 주장하고 있다.

머레이 주치의들은 당시 자폐 범주성 장애 증상을 보이던 그에게 이 약물을 처방했다.

리스페달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조현병과 조울증을 앓는 성인의 치료 용도로 1993년 승인한 제품이다.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이 약물을 사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로 판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 남성들이 이 제품을 복용할 경우 여성형 유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8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유류 보조금 폐지를 포함한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발,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反정부 시위로 마비된 에콰도르 수도

대통령은 지방으로 피신...정부기관 다른 도시로 이전

정부의 유류 보조금 폐지 이후 불붙은 반(反)정부 시위로 에콰도르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년 원주민들이 수도 키토에 몰려와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면서 대통령과 정부 기관은 다른 도시로 쫓겨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키토에서는 각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원주민이 돌과 타이어 등으로 도로를 막고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벌였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3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약속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 보조금을 폐지해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최대 두 배 이상 오른 이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대중교통 노동조

합이 주도하던 파업 시위는 잠잠해지지는 못했지만, 주말새 원주민들이 가세해 시위에 더욱 불을 붙였다.

원주민들은 에콰도르 인구의 7%를 차지하는데 지난 2000년 하밀 마우와드 전 대통령, 2005년 루시오 구티에레스 전 대통령 퇴진에도 에콰도르토착인연맹(CONAIE)의 반정부 시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정도로 조직력을 과시한다.

이날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를 뚫고 빈의회 건물에 진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을 벌였다.

곳곳에서 상점 약탈과 차량 파손 등도 잇따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에콰도르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시위 참가자 570명이 체포됐다. /연합뉴스

美 대학입시 비리 연루  
학부모 부부 각각 징역 1개월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린 대학입시 비리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개월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으로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사기와 공모 혐의로 뉴욕 소재 포장업체 대표인 그레고리 애벗과 전직 언론인인 아내 마사에게 각각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응시한 SAT·ACT 등 대입 시험 점수를 더 얻기 위해 감독관을 매수, 일부 과목의 성적을 조작하는데 총 12만 5천달러(약 1억 5천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벗 부부가 딸을 명문대인 듀크대에 진학시킬 목적으로 점수 조작을 시도했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4만 달러(4천700만원)를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달 선고를 앞두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에게 ‘반성문’을 보내 선처를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백악관 “하원 탄핵조사 협조 않겠다”...공방 격화

“근거없고 위험적” 서한

민주당 강력반발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베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의회 조사 비협조를 공식 선언한 것이어서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 조사를 압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탄핵조사에 착수했다.

팻 시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의 탄핵 조사가 “근거가 없고 위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

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또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가 결여돼 있다”고 언급해 하원이 탄핵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국무부가 이날 핵심 중인 중 한 명인 고든 셉틀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의회 증언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뒤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조사에 대해 “파녀사냥 쓰레기”라고 강력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는 지금껏 정상적이었고 어떤 대가를 약속한 것도 없던 문제였다고 주장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 관료들을 출석시키라는 요구에 대해 “이는 전문가들에 대한 협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탄핵조사가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

방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AP통신은 백악관이 탄핵 위협에 대해 ‘시간 끌기, 알기 어렵게 만들기, 공격하기, 반복하기’라는 새로운 분명한 전략에 착수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권한 남용이자 조사 방해라며 새로운 탄핵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이나 하원의 규칙, 전례에는 탄핵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원 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없다”고 질타하자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탄핵조사 비협조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당분간 조사는 실질적 진전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적 공방만 가열시킬 공산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